

# 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입법 추진

### “접경지 국민에 위협 초래… 이미 제도 개선 검토 중” 법률안 정비 시사… “특정한 법안 결정된 것 없어”

통일부는 4일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단 살포를 막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고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남측이 중단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협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여 대변인은 김 제1부부장 담화 발표를 계기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대북전단과 관련해 관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한반도 정책 4대 추진전략으로 ‘제도화’를 내걸

면서부터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관련 법적 보안을 추진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남북이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를 명시한 관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접경지역의 평화화대화를 위해 이 문제 해결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대북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전단 살포에 나서고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위협, 쓰레기 발생 등 문제로 중단을 촉구해왔다. 그

러나 정부는 전단 살포를 저지하거나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사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제화 추진 현황과 관련, “다양한 안을 두고 검토해왔고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장 적절한 법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단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서 전단 문제를 규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다른 법률을 통해서 규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아직 법안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의 시기를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국회가 출범하면 협의하

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았는데, 이 단체는 오는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10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 대변인은 해당 단체의 추가 대북전단 살포 대응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 담화 내용이나 배경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분석 및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에는 “정부 입법 발표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익수자 위치추적 성공한 해양 드론 순찰대’

4일 군산 앞바다에서 인명구조정비(레स्क류 튜브)를 탑재한 해양 드론 순찰대가 익수자를 수색해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 靑 “대북 빼라는 백해무익… 안보 위해 행위 단호히 대응”

청와대가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판 담화의 배경이 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빠라) 살포에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으로 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관해선 “논쟁하지 않겠다”며 “통일부에서 입장을 밝혔으니 그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자신 명의의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에서 살

포한 대북전단은 4·27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측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계속 방치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비롯해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

그간의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물을 모두 없앨 수 있다는 취지로 남측의 단속 책임론을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것은 단속 책임론을 제기한 김 부부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통일부도 이날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7월 민주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

## ‘합의 추대로 의견 모아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이 오는 7월로 예정된 가운데 경선이 아닌 ‘합의 추대’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정을 이월 성과를 내자는 분위기인데 경선보다는 합의 추대가 좋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만찬 이후 전주 등 도내 지역구 9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모여 대화를 나눈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당위원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으로는 이상직 의원과 김성주(전주병) 의원 두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의 경우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추대로 위원장을 선출했다”며 “당 전당대회 이전인 오는 7월경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도당위원장 선출보다 전북도당이 청와대와 지방정부 등과 어울려 가는 시스템 마련이 더 급선무인 것 같다”며 “지역 의원들이 팀워크를 이뤄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균형발전, 문 정부 핵심과제’

### 민주, 21대 국회서 지방자치법 등 법안 개정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을 위한 간담회 서면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뿌리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등이 골자였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축사에서 “올해와 내년이 자치와 균형을 든든하게 정착시키고 성과 매듭지를 중요한 시기”라며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경찰법, 재정분권 관련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제를 민주당의 핵심 의제·법안으로 삼아 성과를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축사에서 “지자체의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능가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유능한 임명직 단체장도 무능한 선거직 단체장만은 못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자치분권 강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포럼 자치와 균형’에는 지자체장 출신 의원 42명이 참여했다. /뉴시스

### 도의회 행사위, 전북

### 이통장연합회 의견수렴 간담회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가 전북도 이·통장연합회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4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전북도 이·통장연합회는 이·통장 역량강화 등 연합회 활동 지원 예산 증액과 시·군별 상이한 이·통장 임기가 통일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통장연합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